

새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당초 급격한 체제위기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순탄하게 권력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은에 의해 주도되는 대내외적 경제정책의 변화 움직임은 경제개방과 개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에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기실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는 김정일에 의한 경제정책에 기반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김정은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경제활로를 찾으려는 김정은의 행보는 다소 파격적으로 비쳐진다. 더구나 최근 장성택 일행이 보였던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열망은 그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 정치체제의 안정화와 경제회생이 북한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으로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이른바 '6·28방침'('우리의식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비공개 내부 방침)는 주목된다. 물론, 민족자립경제를 표방한 체 사회주의계획경제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경제난을 가중시켜온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점에서는 크게 새롭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비견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내용상 두 경제개선조치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정책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김정일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간에서는 이를 이른바 '김정은식 혁명'으로 향후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행보 다른 결과 가져올 수 있다

이무튼 경제개선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보여주는 일련의 파격적인 행보는 과거의 조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즈음한 북한의 일련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의 정비내용이 기존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과거 문제점 개선을 통한 외국인의 투자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의 확립과 외국인투자의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체제의 강화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것은 북·중경협 확대에 따른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도된 북·중간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남북경협 구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일이다. 북·중간 무역수치의 급격한 증가와 상대적으로 남북경협의 감소 추세는 북·중경협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한다. 더구나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면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국제경제규범 속으로 진입하였으며,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원칙과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중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핵개발 등으로 대외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개혁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치는 국제사회를 향한 개방 확대라는 메시지이자 세계화를 하고자 하는 자세라고 평가된다.

북한의 자본주의 편입을 위한 변화과정을 선도해야

북한이 중국을 비롯, 북한에 투자하는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제도화하는 조치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하다. 시장경제원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국제경제규범을 수용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과의 차이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자본주의로의 편입을 위한 변화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체에 우리는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개선조치와 대외적 투자유치확대 정책과 관련, 그 상응하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시대의 준비를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보다 큰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율하여 온 법령체제의 개편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와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외부 환경은 종래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법령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 제의는 일면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법령체제로 개편하고,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전,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남북간 새 경제협력의 장 조성,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대북투자의 보장,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및 지원, 통일재원 확보 등 구체화된 제도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 변화의 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끝